

민주·정의·安, '대선개입 특검법안' 오늘 공동발의

범야권 공조... 모든 불법행위 수사 대상 수사기간 60일로... 두차례 연장도 가능

야권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23일 발의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부처 대선개입 사

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식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발의할 이 법안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작시했다.
특히 공무원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해 청와대·국정원·법무부·검찰, 경찰이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 후보자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 가 고르던 기존 방식이 아닌,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1차

로 30일, 2차로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조항은 이번 특검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연석회의는 "대선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법정부처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축소·은폐·비밀공개·수사방해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중립적, 독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유사 사건을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 특검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회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만큼 검

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특검법을 올애 안에 꼭 마무리해야 국회는 민생법안과 예산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수을 촉구했다. 특검법안 공동발의는 지난 3일 여야 4자회담 이후 과열을 내던 야권과 시민사회의 공조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해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박원순·최장집·김종인 손학규 '싱크탱크' 특강자 눈길

손·안 연대 관심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행사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나란히 참석,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태화문화재단에서 열린 손 교수의 싱크탱크 격인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미래아카데미 수료식에서 차례로 특강을 했다.
이들 중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 의원에

이나 국회의원이 선거 때 공약했던 것들을 당선 후 꼭 지키도록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최근 철도노조 파업을 예로 들며 '대통령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해놓고 슬그머니 민영화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이 심의할 기회도 주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 투쟁하는 것도 좋지만, 국정운영 실력을 쌓아 대안정당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민주화를 이뤄낸 지는 20년이 넘었지만, 경제민주화는 진전되지 않고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이는 정치인의 결단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고통화·저출산 문제와 무상보육·무상교육 문제는 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직결돼 있다"며 "단순히 복지정책의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경제문제로 인식하는 등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는 대통령

김 전 위원장은 "정치민주화를 이뤄낸 지는 20년이 넘었지만, 경제민주화는 진전되지 않고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이는 정치인의 결단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고통화·저출산 문제와 무상보육·무상교육 문제는 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직결돼 있다"며 "단순히 복지정책의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경제문제로 인식하는 등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는 대통령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조포럼 창립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창립선언문 낭독을 경청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강운태 시장 지원 '창조포럼' 출범

이수성 전 총리 등 1만여명 참석 대성황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운태 광주시장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창조포럼'이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대회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박주선 국회의원, 고재유 전 광주시장 등 정치인과 광주지역 각계 원로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대표, 분과위원장, 일반 회원 등 1만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회원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광주시민은 대한민국의 발전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

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다"며 "우리는 계층 간 세대간 빈부 간의 장벽을 허물고 하루하루가 창조적 에너지로 가득 찬 도시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광주에서 출범하는 창조포럼이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이 길을 잃고 불안해하는 이때 광주가 창조적 리더와

함께 시대를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반회원으로서 가입한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날 축사에서 "광주가 잘 살아가야 한다는 절규와 간절함이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며 "DJ가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을 되새기며 창조포럼이 통합의 광주, 잘사는 광주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럼 측은 행사장에서 '1인 1도서 모으기'를 통해 기부받은 4000여 권의 책을 어린이 및 마을 도서관에 기증했으며, '사랑의 커피' 모금액을 통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쓰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개특위' 소위 구성...27일 첫 공청회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는 지난 20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과 함께 공청회 개최 일정을 의결했다.
특위는 우선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와 교육자치관련법 소위를 각각 구성했다.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는 여야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이 맡았다. 전남의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지방선거 소위에 배속됐다. 교육자치관련법 소위는 여야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고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특위는 오는 27일 지방자치 선거제도를 주제로, 내년 1월 7일에는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를 주제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각 공청회에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한 6명을 진술인으로 참석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앞서 오는 26일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위는 또 이미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2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해당 소위에 회부했다.
/박지경기자 jkipark@kwangju.co.kr

폐기물 위탁업체 지원금 삭감 요구

서구의회, 추경안 통째로 부결

민간위탁 폐기물 업체 지원 예산이 포함된 광주시 서구의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가 부결됐다.
서구의회는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김종식 서구청장이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3239억100만원(일반회계 3236억700만원, 특별회계 52억9400만원)을 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참석의원 13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예산안에 찬성했으나 통합진보당 의원 4명이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3명이 기권했다.
임금삭감과 위수탁계약 미준수 등 문제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형 폐기물 위탁업체인 M업체에 대한 서구청의 추가 지원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작됐다.
서구의회는 지난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M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연장 근로수당 및 추가고용승계비용 등 지원 예산 1억70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 이은주, 이대행, 김은아, 류정수 의원은 "문제의 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2013년 민간위탁금 6억4800만원 중 2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며 이 업체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수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주에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하고 의결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전체 부결은 유례가 없는 일로, 이대로라면 복지·주민지원 등 추경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늦어지거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시비를 분담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어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금매"

1층상가 - 25평

- ▶ 정문코너, 편의점 임대 중 (보3천만원에 월 125만원)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7,500만원

13층 - 오피스텔

- ▶ 53평, 주거겸 사무실
- ▶ 양동/하천쪽, 전체 올수리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5,500만원

10층 - 오피스텔

- ▶ 29평, 주거겸 사무실
- ▶ 하천쪽, 전망좋은
- ▶ 시세 1억원 정도
- ▶ 급매 6,500만원

회사 사정상 매매함

H.010-4667-9300

경매

- ▶ 투자 하실 분! 1억원 이상
- ▶ 비법 배우실 분! 1,200만원
-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 단독/공동투자 가능
- ▶ 엔피엘/특수물건만 취급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